

KIEP

오늘의 世界經濟

World Economy Update

제 03 -45 호 / 2003년 11월 13일 발간

일본 중의원 선거결과에의 의미와 전망

작성자 :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

김은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

【jung@kiep.go.kr, ☎ 3460-1202】

【eunji@kiep.go.kr, ☎ 3460-1035】

主要內容

- 11월 9일 시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집권 연립여당은 안정적 국회운영에 필요한 의원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의석수가 축소된 반면,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약진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남. 이로써 향후 일본정치구조가 다수당 난립구조에서 양당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.
- 금번 선거에서는 경제재정운영, 중앙 및 지방정부간 세제개혁, 특수법인개혁, 사회보장개혁, 안보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구체적인 선거공약이 유권자의 정책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.
- 민주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의원수를 확보한 집권 연립여당은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 이번 선거를 계기로 향후 일본에서는 헌법개정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.

對外經濟政策研究院

1. H, 중의원 선거 결과

- 2003년 11월 9일 실시된 제43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선거 공약이 유권자의 정책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. 그 결과 자민당의 의석 확보가 축소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일본 정치구조가 다수당 난립구조에서 양당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.
- 집권 연립여당(자민당, 공명당, 보수신당)은 안정적 국회운영에 필요한 절대안정다수의석¹⁾을 상회하는 275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, 자민당은 선거전에 비해 10석이 모자라는 237석의 확보에 그침.
 - 자민당은 고이즈미 총리의 압도적 재선과 구조개혁노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분투했으나, 단독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음.
 - 연립여당내에서 유일하게 선거전보다 많은 의석수(31석→34석)를 확보한 공명당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,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.
 - 한편 구마타니(熊谷 弘) 당대표의 낙선, 의석 확보 실패(9석→4석) 등으로 당의 존립기반이 위축된 보수신당은 당을 해체하고 자민당으로 합류할 방침을 결정함. 이로써 연립여당은 자민당과 공명당 2당체제로 재편됨.
 - 또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가토(加藤 紘一) 자민당 前 간사장을 포함한 3명의 무소속 의원과 4명의 보수신당 의원을 자민당이 추가로 영입함으로써, 자민당 의석은 총 244석으로 확대됨.
-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사회당이 달성하였던 제1야당 최고 의석수(166석)보다 많은 177석을 획득하여 전후 최대의 제1야당으로 크게 약진하였음.

1) 절대안정다수의석이란 국회의 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석수로서, 여당이 야당을 앞설 수 있는 의석수를 말함. 현재 절대안정다수의석은 269석임. (日本經濟新聞, 2003. 11. 10)

- 사민당과 공산당은 모두 선거전 의석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결과를 나타냄. 사민당의 경우 도이(土井 高子) 당대표가 소선거구에서 낙선하여 비례대표구로 '부활 당선'되었고, 공산당도 소선거구에서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참패를 면하지 못하였음.

<표 1> 제43회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

정 당		소선거구	비례대표	합 계
연립 여당	자 민 당	168	69	237 (247)
	공 명 당	9	25	34 (31)
	보수신당	4	0	4 (9)
여당 합계		181	94	275 (287)
민 주 당		105	72	177 (137)
사 민 당		1	5	6 (18)
공 산 당		0	9	9 (20)
기 타		13	0	13 (18)

주: () 안은 선거전의 의석수

2. 선거결과 분석

- 자민당이 선거전에 비해 10석을 하회하는 의석수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선거결과는 자민당내 개혁의 저항세력을 포용하는 거당적 정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짐.
 - 따라서 연립여당내 공명당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금번 총선거를 통해 변화된 세력관도하에서 여당내 정당간의 대립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해석됨.
- 금번 총선은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대 정당이 '정권공약(일명 매니페스트)²⁾을 내세운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, '정책선거'의 가능성을 높인 선거로서 평가되고 있음.

2) 정권공약이란 정책의 달성목표기한, 수단인 재원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선거공약을 일컫음. 또한 정책 추진 결과를 후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, 정권공약이 정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평가되고 있음.

- 자민당은 우정사업 및 도로공단 민영화를 제창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에 정책노선을 강조하였으나, 원칙적인 개혁의지 천명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.

- 한편 민주당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문제에 대하여 ‘정권공약’을 제시하고 정책실시의 시한 및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전략을 구사한 결과, 제1야당으로서 크게 약진하였음.

○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‘정권교체’ 목표는 실패하였으나, 민주당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및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달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함.

□ 또한 금번 선거는 양대 정당정치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됨. 이와 같은 정치구조의 변화는 ‘소선거구·비례대표 병립제’라는 선거제도 변화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.

- ‘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’는 소수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소선거구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, 소선거구제와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조합한 선거제도임.

○ 동 제도에서는 총 480석 중 300석이 소선거구로 선출되며, 나머지 180석이 비례대표로 선출됨. 후보자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어,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‘부활 당선’되는 경우도 있음.

- 한편 ‘소선거구·비례대표 병립제’가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제도적 특징은 금번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. 이러한 선거결과는 향후 일본 정치구조가 다수당 난립구조에서 양당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분석됨.

3. 각 정당별 주요 정책 현안

□ 금번 총선에서는 경제재정운영,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세제개혁, 특수법인개혁, 연금·고용 등의 사회보장개혁, 안보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정권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, 유권자의 정책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(표 2 참조).

<표 2> 각 정당별 총선거 주요 정책 현안

		경제재정·세제	연금·고용	특수법인개혁	외교·안보
연 립 여 당	자 민 당	· 06년도 명목 GDP 2% 이상 · 06년도까지 보조금 4조 엔 감축	·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1/2로 인상 · 300만 명 고용창출	· 07년 우정사업 민영화 · 04년 도로공단 민영화 법안 제출	· 미·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평화협조를 중시 · 국제평화협력을 위한 기본법 제정
	공 명 당	· 4년간 공공사업 1조 엔 이상 감축	·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08년도 1/2로 인상 · 500만 명 고용창출	· 고속도로의 구간별 요금할인과 야간할인 시행	· ODA 예산의 20%를 빈곤대책 등에 우선 배분
	보 수 신 당	· 06년도까지 디플레이션 극복 · 법인세율 인하	· 소비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· 실업률 4%대 전반으로	· 도로공단 민영화는 민영화 추진위원회 의견 존중	· 항구적 입법 제정
야 당	민 주 당	· 05년까지 '재정재건플랜'을 책정 · 보조금을 18조 엔 폐지	·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단계로 재구축 · 실업률 4%대 전반으로	· 우정사업의 민간참가를 촉진 · 도로공단 폐지 · 대도시 이외 고속도로 3년간 무료	·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자위대 파견 반대 · 05년에 新방위구상을 책정
	공 산 당	· 공공사업 50% 삭감 · 소비세 증세 반대 ·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대	·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1/2로 인상 · 고용보험 급부기간을 1년 연장	· 우정사업 및 도로공단 민영화 반대 · 고속도로요금 단계적 인하	· 자위대 이라크 파병 반대 · 미·일 안보조약 폐기
	사 민 당	· 최저 2년간 명목 GDP 2% 달성 · 보조금 축소·폐지	·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04년도에 1/2로 인상 · 200만 명 고용창출	· 우정사업을 국영사업으로서 운영 · 도로특정재원을 지자체로 이양	· 자위대 이라크 파병 반대 · 자위대 규모와 장비 축소·개편

자료: 『日本經濟新聞』(2003. 10. 28). 「マニフェスト揚げ対決」을 참조로 작성.

- 자민당은 2004년 도로공단 민영화 법안 제출, 2007년 우정사업 민영화 방침

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음. 실업대책으로 300만 명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음.

- 한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민주당은 소득비례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‘소득 비례연금’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‘국민기초연금’이라는 2단계 연금제도를 제안함과 동시에 도로공단 폐지 및 대도시 이외의 고속도로를 3년간 무료로 시행한다는 특색 있는 공약을 제시하였음.
-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공적연금에 대한 재검토가 2004년으로 예정되어 있어,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금번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됨.
-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각 당은 국고부담비중을 모두 현행 1/3에서 1/2로 인상시킨다는 공통된 공약을 내세웠으며, 시행시기와 재원에서 입장차이를 나타냄.

4. 향후 전망과 시사점

- 민주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개혁노선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한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여당의 구조개혁노선은 향후에도 커다란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.
- 고이즈미 총리는 총선 후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을 받은 후, 현 내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2차 고이즈미 내각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고, 산적해 있는 개혁과제를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임.
- 구체적으로 연금개혁, 지방재정개혁, 도로공단과 우정사업의 민영화 등의 특수법인개혁, 부실채권처리, 금융시스템의 안정화, 기업 및 산업의 재생 등 고이즈미 내각이 내세웠던 개혁 공정표에 입각한 구조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해갈 것으로 보임.

□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로 인하여 경기가 상승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개혁추진에 호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.

- 한편 현재의 경기상승이 엔고 및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단기적인 상승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, 장기적인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개혁추진이라는 호순환이 얼마나 지속될지의 여부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.

□ 이번 총선에 의해 사회당 및 공산당과 같은 호헌세력의 입지가 사라진 점은 ‘일본의 우경화’의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며,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.

- 현행 헌법은 자위대의 전력강화,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군사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자민당 보수파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개정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.

- 게다가 일본헌법의 고수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금번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, 정치적 영향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됨. 따라서 향후 일본에서는 헌법개정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.

○ 헌법개정론의 핵심인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의 전쟁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가 일체의 전투력을 가질 수 없게 하고, 나아가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.

- 한편 대외 현안으로서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하여, 연내 파병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을 감안하여, 파견결정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황임.

□ 제2차 고이즈미 내각의 구성멤버가 바뀌지 않은 만큼, 일본정부의 대외통상

정책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 따라서 한·일 FTA의 추진과정에도 이번 총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도시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의 확보에 실패하였음.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촌세력은 자민당이 중심이 된 연립정권의 무역자유화 정책에 계속적으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- 그러나 ASEAN을 중심으로 한 FTA 체결은 아시아지역에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일본의 농업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
□ 한국은 무역자유화 부문에서 뒤져 있는 일본보다도 더욱 뒤져 있는 상황임. 따라서 FTA의 체결 및 무역투자 자유화의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농업, 환경, 노동, 사회제도 등 자유화에 동반되는 사회적인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.